

이슈브리프 847호
(2026. 5.27)

「글로벌 AI 허브」 출범의 의미와 과제

제847호

김민정 mkim@inss.re.kr



국문초록

우리 정부는 2026년 5월 21일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UN 주요 기구를 포함한 9개 국제기구와 5개 다자개발은행(MDB)이 참여하는 AI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공동성명은 「모두를 위한 AI,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AI」를 비전으로, 정책·표준 수립, 데이터·모델·실증사례 공유, AI 도구·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허브의 운영 역할로 명시하였다. 본고는 「글로벌 AI 허브」가 우리 정부의 다자 협력 외교에서 가지는 의의를 정리하고, 출범 직후 운영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제시한다. 이번 출범은 기존 AI 정상회의가 정부 간 선언 채택에 주력했던 흐름과 달리 보건 분야와 기후 대응 등 발전·협력형 AI 과업을 UN 전문기구의 사업 집행 권한과 다자개발은행의 개발 자원 운용 역량 안에서 결집했다는 의의가 있다.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던 발전·협력형 AI 사업을 단일 협의체의 공동사업 의제로 편성한 다자 협력 성과이며, 다수의 다자개발은행이 국내에 AI 특화센터를 각각 설립해 허브와 연계하기로 한 점도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특화센터별 사업 분야와 예산 규모, 이행 일정의 확정 등은 후속 합의 과정에서 점검할 과제이다. 선행 협력 사업과의 기능 분담 및 사무국 운영 체계의 정착 여부도 향후 성과 판별의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글로벌 AI 허브, 국제기구, UN, 발전·협력형 AI, 다자개발은행, AI 거버넌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21일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9개 국제기구와 5개 다자개발은행(MDB)이 참여하는 AI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모두를 위한 AI,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AI」(AI for All, AI to Solve Global Challenges)를 비전으로 채택했다. AI 규범·표준 정립, 인류 난제 해결, AI 격차 해소를 3대 실천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구현할 허브의 운영 역할로 정책·표준 수립, 데이터·모델·실증사례 공유, AI 도구·솔루션 개발 및 실증의 세 가지를 공동성명에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AI 기술 수용과 산업 육성에 주력해 왔으나 이번 출범으로 각 분야에서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던 발전·협력형 AI 사업을 단일 협의체로 결집하여 사업화 국면으로 이행시킬 중견국 실행 외교의 거점을 확보하였다. 사업 집행 권한을 보유한 UN 주요 기구를 포함한 9개 국제기구가 정부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고, 5개 다자개발은행이 국내에 AI 특화센터를 설립하여 허브와 연계하기로 발표한 점도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특화센터별 사업·예산·이행 일정의 구체화는 후속 합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다. 또한 ITU 「AI for Good」, 이탈리아 정부·UN개발계획(UNDP) 공동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AI 허브」, 아프리카개발은행(AfDB)·UNDP 공동 「AI 100억 달러 구상」 등 선행 협력 사업과 기능이 겹칠 우려가 있어 이들과 차별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본고는 「글로벌 AI 허브」가 우리 정부의 다자 협력 외교에서 가지는 의의를 정리하고 출범 직후 운영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제시한다.

발전·협력형 AI 사업의 다자 결집 성과

2024년 「AI 서울 정상회의」는 주요국 정상·각료 선언으로 종료되었고, 2023년 「블레츨리 AI 안전 정상회의」와 2025년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도 정부 간 선언 채택에 주력하였다. 이에

비해 다수의 국제기구와 다자개발은행이 우리 정부 주도 협의체에
동시 참가한 「글로벌 AI 허브」 출범은 선언 이후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 다자 협력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고에서
사업화는 정부 간 선언이 실제 공동사업으로 구체화 되고, 정책
자문과 표준화 중심의 협의가 다자개발은행 재원 협의와 연결
되며, 국제 규범과 표준이 분야별 현장 적용 사례로 검증되는
제반 과정을 포괄한다. 우리나라는 2024년 AI 서울 정상회의
공동주최와 2025년 인천 송도 한국-세계은행 글로벌 디지털 지식
센터 개소, 2026년 1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통해 외교·제도
자산을 축적해 왔다. 이번 출범은 축적된 자산을 다자 협력 의제의
사업화 기반으로 활용할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로벌 AI 허브」는 기관별로 흩어져 추진되던 발전·협력형
AI 과업을 우리가 주도하는 협의체 내에서 UN 전문기구 9개와
다자개발은행 5개의 공동사업 의제로 편성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제 AI 의제가 미국 행정명령 14365호, EU AI 법(AI Act) 고위험
의무 시행 및 캘리포니아·텍사스 AI 법제 등을 거치며 안전 규제와
통상 경쟁에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허브는 보건과 식량, 기후
대응 등 발전·협력형 AI 과제를 다자 협력 의제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발전·협력형 AI 과제는 이미 보건이나 식량 또는 이주·기후 분야에서
국제기구 사업으로 축적됐다. 보건 분야에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 참여한 「보건 AI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표준화와 현장
이행을 담당해 왔고, 식량 분야에서는 UN식량농업기구(FAO)
로드맵과 ITU 「AI for Good」 산하 「식량체계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세계식량계획(WFP) 조기경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주 및 기후 분야에서도 국제이주기구(IOM)와 마이크로

소프트의 협력이 기후 유발 이주 분석에 AI를 적용하고, ITU 「AI for Good 글로벌 정상회의」는 보건·농업·기후 현안에 대한 AI 활용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로써 기존 국제기구 사업이 한국 주도 협의체 안에서 공동사업 의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5개 다자개발은행은 한국 내에 각자 AI 특화센터를 설립하여 「글로벌 AI 허브」와 연계하기로 발표하였다. 세계은행(WB)이 작년부턴 글로벌 디지털 지식센터를 운영 중이며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도 한국 내 AI 특화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다자개발은행의 특화센터 설립으로 정책 자문과 표준화 위주의 협력이 개발 자원 협의로 확장될 여지가 생겼다. 다만 특화센터별 사업 분야와 예산 규모, 이행 일정은 후속 합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다.

미국·중국·EU는 각각 모델·반도체, 인프라·자본, 규범 역량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제기구 사업 수요와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동시에 결합하는 사업화 거점을 자국 주도로 운영해 온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분산된 발전·협력형 AI 사업을 공동개발·실증·교육·자원 결합 사업으로 전환하는 중견국 실행 외교의 거점을 확보하였다.

「글로벌 AI 허브」의 역할 설계 과제

「글로벌 AI 허브」는 AI 규범 및 표준 정립, 인류 난제 해결, AI 격차 해소라는 3대 실천 과제를 국제기구 공동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후속 운영 구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동성명이 명시한 정책·표준 수립, 데이터·모델·실증사례 공유 및 AI 도구·솔루션 개발·실증은 이를 실제 사업으로 옮기기 위한 운영 역할에

해당한다. 이 중 정책·표준 수립은 UN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 및 ITU·OECD 표준 논의가 축적한 원칙을 활용하여 분야별 활용 지침과 점검 항목을 정리하는 과업으로 설정할 수 있다. 데이터·모델·실증사례 공유와 AI 도구·솔루션 개발·실증은 보건이나 식량, 또한 이주·기후 등 분야의 국제기구 과업과 결합하여 교육훈련과 현장 적용 및 제도 설계 지원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참여 절차도 사업 설계 단계에서 함께 정비될 필요가 있다. AI 거버넌스 논의에서는 정부 간 협의만으로 기술 변화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 채택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와 기술 공동체의 실질적 참여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글로벌 AI 허브」는 국제기구와 정부 협의에 한정되는 운영을 피하고 시민사회와 기술 공동체가 사업 수요 발굴과 기술 검증 및 성과 점검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AI 레드라인 논의는 「글로벌 AI 허브」의 초기 운영 범위를 정하는 외부 제약 요인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연합이 주도한 「AI 레드라인을 위한 글로벌 호소」는 생물무기 설계, 대규모 허위 정보 및 아동 대상 조작 등 고위험 AI 활용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2026년 말까지 집행 장치를 갖춘 국제 합의를 촉구하였다. UN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는 2026년 7월 제네바 회의를 준비 중이나, UN 총회 결의 A/RES/79/325가 논의 범위를 비군사 분야로 한정하고 있어 무기체계와 군사 감시 영역의 레드라인 요구는 의제 밖의 독립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자국 AI 산업 우위, 국방 활용 재량 및 대중(對中) 기술 보호를 우선하고 있어 국제기구 주도 금지 규범의 단기 합의 여건은 제한적이다. 2026년 4월 국가안보 기술 각서 4호(NSTM-4)는 중국 기반 외국 행위자의 미국 첨단 AI 모델 무단 증류를 산업 규모의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엔트로픽

(Anthropic)의 완전 자율 무기와 대규모 감시 관련 자체 레드라인 논란,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등 친(親)트럼프 진영의 고위험 첨단 AI 모델 공개 전 정부 시험·평가 요구는 미국 내부에서도 레드라인 논의가 안보·노동·주권 보호 의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건에서 「글로벌 AI 허브」는 레드라인 형 고위험 규범 논의를 초기 의제로 과도하게 부각하기보다, 공공목적 AI 사업을 통해 선형 다자 논의의 적용 사례를 축적하는 데 무게를 둘 수 있겠다. 보건이나 식량, 이주 혹은 기후 등 분야에서의 공동사업은 규범 합의가 지연되는 환경에서도 국제기구의 현장 과업과 한국의 기술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데이터·모델 공유와 현장 실증 성과를 축적하고, 이를 UN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와 유네스코 권고 이행 평가 및 ITU 표준화 논의의 적용 사례로 제공함으로써 결집·사업화 거점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다.

실행 역량 입증 과제

「글로벌 AI 허브」의 후속 과제는 출범식에서 확인된 다자 결집 성과를 국제기구별 공동사업과 연내 성과물로 구체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의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경험, 사업 수요를 우리의 컴퓨팅·데이터·응용 역량과 결합하는 공동 설계 절차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지 수요 반영과 맞춤형 적용 역량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왔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제조 훈련 허브 지정 이후 저소득국과 중소득국을 대상으로 백신이나 항암제 등 생물의약품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형 제조 훈련을 제공해 왔으며, 실습형 교육과 제조 현장 훈련을 통해 국가별 수요에 맞춘 현장 숙련 전수 경험을 축적하였다.

농촌진흥청의 해외 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도 개발도상국의 작목·지형·기후·식생활에 맞춘 현지 적응형 기술을 제공해 온 사례다. 다만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어 운용 기간이 짧으므로 국내 운용 사례가 축적되는 추이를 보아 가며 추진할 사안이다.

국제기구의 AI 수요는 컴퓨팅 접근성과 응용 서비스 이용 환경, 안전 검증 및 교육훈련 여건 등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우위, 한국어 기초모델 추진, 소버린 AI 기초모델 팀 선정 및 데이터센터·칩단 패키징 투자 계획을 토대로 공급망 역량과 응용 확산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중견 AI 국가로 평가된다. 다만 국제기구 과업과 결합하려면 연산 자원 접근성이나 전력·냉각 인프라, 데이터 관리 여건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다자 AI 거버넌스 협상과 다국적 협의체 사무국 운영을 주도한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사무국 운영 인력의 다국적 협업 역량 확보도 출범 직후 정비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범 이후에는 실행 거점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각 국제기구와의 협력 과제를 공공목적 AI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존 UN 플랫폼이 국제 논의와 표준화 기능을 축적해 온 만큼, 한국의 「글로벌 AI 허브」는 한국의 AI 정책, 컴퓨팅 인프라 및 연구·산업 역량을 활용한 교육·실증·공동사업 추진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의 AI 활용 고용정책 협업, WHO와의 감염병 조기경보 및 보건 데이터 활용 원칙 정립, UNDP와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초기 협력 과제로 검토 가능하다.

다수의 국제기구와 민간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교육·실증 사업을 수행하면서 AI 협력 분야의 인지도를

축적해 왔다. 국제기구 부문에서는 ITU 「AI for Good」가 기술 역량, 표준, 협력망을 결합한 장기 플랫폼을 운용해 왔으며 OECD는 AI 국제적 동반관계(GPAI)를 OECD 권고 이행을 위한 통합 협력체로 운영하고 있다. EU는 유럽 AI 사무소(European AI Office)를 통해 EU AI 법 이행 지원과 일반목적 AI 모델 규율 집행 역량을 제도화하였다. 유네스코도 채택 당시 193개 회원국에 적용되는 AI 윤리 권고를 토대로 AI 준비도 평가 방법론과 글로벌 AI 윤리·거버넌스 관측소를 운영하며 국가별 적용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Google.org의 생성형 AI 지원사업이 21개 비정부기구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3,000만 달러 지원과 6개월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생성형 AI 지원사업도 AI 창업기업에 8주 프로그램과 AWS 크레딧을 제공하고, 멘토링을 포함한 누계 2억 3,000만 달러 규모 지원을 추진해 왔다. IBM도 자사 학습 플랫폼을 통해 AI 학습자 양성을 추진하고 비영리·공공기관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개발금융과 안전성 평가 부문에서는 세계은행의 저소득국·중소득국 공공 부문 AI 도입 사례 저장소와 GovTech 파트너십, 한국-세계은행 글로벌 디지털 지식센터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AI 준비도 지수, 영국 AI 안전연구소(AISI)의 첨단 AI 위험 평가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AI 허브」는 선형 플랫폼이 축적한 논의와 도구를 활용하면서, 국제기구별 수요를 공동개발·실증·교육·재원 결합 사업으로 전환하는 실행 기능을 조기에 입증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AI 허브」의 다음 단계는 출범식에서 확인된 다자 결집 성과를 공동사업 목록과 참여기구별 담당 분야로 구체화하는데 있다. 5개 다자개발은행이 한국 내에 설립할 AI 특화센터별 사업 분야와 예산 규모, 사무국 운영 체계의 정착 여부도 후속

성과를 판별할 주요 요소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AI 허브」는 선언형 협의체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목적 AI 협력을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는 중견국 실행 외교의 성과로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